

## 2005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안 세 경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 I. 머리말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우리경제는 국제 유가의 불안요인은 계속 이어지고, 달러화 환율의 유동성 등 대외 경제여건상 많은 가변성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수출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증가율은 둔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내수에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각 부문에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할인점과 백화점의 매출이 약간 증가추세에 들어서고, 카드사용액의 증가, 주가의 상승추세 등의 밝은 징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회복기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대세이다.

이처럼 금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정

부의 비장한 대응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악조건 속이지만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5% 성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경제정책수단을 총동원,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로운 민자유치 제도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중심으로 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금년 하반기 경기부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궁극적인 사업주체인 기업과 자치단체 등 지역단위에서 활발히 동참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경제활력화대책」을 마련, 전국 지자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현실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이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지역경제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경제지표>	'04	'05 목표
• GDP 성장률	4.7%	5% 수준
• 소비자 물가	3.6%	3% 초반
• 실업률	3.5%	3% 중반
• 경상수지	276억불	200억불수준

## II. 지역경제활력화 대책의 추진

### 1.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진작

2005년도 상반기중 총발주예산 33.8조원의 81%인 24.1조원을 사업발주하며 발주금액의 52%인 12.5조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3월말까지 계약절차가 단순한 10억원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중점발주(전체 공사의 89% 차지)하고, 선금보증서가 확보되는 한 최대한 선금지급을 하는 등 최종수요자 기준에서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간단체, 유관기관간 「조기집행 협의체」 구성, 「조기집행 추진상황실」 설치,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추진체계 확립 및 추진현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 2. 신활력사업 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금년 처음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 잠재력을 분석한 후 적정사업이 선정되도록 컨설팅 기능강화(전문가인재풀 343명), 사업계획과 실적 등에 대한 전문가그룹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도입 실시하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선심성 나눠먹기식' 방식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으로 투자성과를 극대화하며 지역수범사례를 발굴·전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수시배정하고 계획 확정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예산을 지원하며 조기집행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06년도 예산배정시 반영하는 등 사업비의 조기배정 및 적기 집행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 ※ 지역개발사업 주요 내용

신활력지원사업	70개시군 2,000억원 (3년단위, 최대9년간)
오지종합개발사업	399오지면 1,00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410개도서 900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	98개읍면동 400억원
소도읍육성사업	43개소도읍 437억원

### 3. 회계·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지원 강화

원도급자가 발주자(지자체)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불 협의시 차기입찰에서 입찰점수 『인센티브』를 부여 (1년간 실적 10%이상 또는 당해공사 직불계획에 20%이상에 대한 직불 협의시 적격심사 가산점을 부여토록 조정)하고 관급계약 이행시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변경 추진하며, 선금지급도 최대 확대(계약금액 70%까지)하고, 기성금은 30일 간격으로 지급하는 등 최종수요자(계약상대자 등)에게 신속한 자금집행을 유도한다.

지방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05. 3월 시행 목표로 추진중인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상향조정(일반공사 : 50억원 ⇒ 70억원, 전문공사 : 5억원 ⇒ 6억원, 기술용역 : 1.5억원 ⇒ 2.1억원)하고 설계용역 입찰 참여시 수도권 업체가 지방업체를 20%이상 공동참여 시키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종 공사 낙찰시 지방업체 참여촉진을 통한 지역의 고용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공개 및 적정산정요령을 작성·시달하는 등 공사에정가격 산정의 투명성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4. BTL사업의 적극 참여**

정부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BTL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자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 연내에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해 나갈 것이다.

※ 지자체 관련 BTL대상사업(예시)

-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 시설 확충, 노인복지회관 확충 등 3개 분야

- 도서관 건축,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예술시설 등 3개 분야
-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 교체, 노후 수도관 정비 등 2개 분야

※BTL(Build-Transfer-Lease)제도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체도로 정부가 지난해 말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민자유치제도

- 정부는 대상 사업(사회기반시설)과 사업모델 제시
- 민간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출자 또는 용자를 통해 공공시설 건설
- 정부(자자체)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장기간 임차 사용

**5. 지방공기업 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이미 지방공기업법 개정('04. 12. 30)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 분야를 확대한 바 있으며 지자체별로 예산조기집행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지방공기업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SOC사업, 지방공기업 사업 등에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약 5,000원)을 활용 지원해 나갈 것이다.

**6. 새마을금고 자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 투자한도(자기자본의 30% → 50%)확대, 타 법인 출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 중)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법개정을 추진하며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고 여유자금을 BTL사업에 투자하여 투자 유망 5개~7개 사업을 선정 집중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투자 펀드(fund)를 조성하고 금고연합회에 사업발굴 전담팀의 구성 및 개별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한 사업별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투자사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다.

### Ⅲ.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추진

#### 1. 서민생활 보호대책 강화

사회복지사가 관내 생계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노숙자 쉼터 입소유도, 쪽방 등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조치 등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도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다.

일시적 소득감소·실직자 등 적극 발굴,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간병도우미, 폐자원 재활용 등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보급 확대 등 영세민·소규모 자영업자 생활보호 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업소 활용, 지역농·축·수산물 애용 및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업소·상품 애용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무원 외식장려 등 자체 특수시책 개발 시행을 통해

서민경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凡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의 적극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 2. 지방 일자리 창출 지원

금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05년도 사업비 및 인원 : 1,623억원, 10만명)하고, 추경편성시 공공근로 사업비 추가반영을 적극 검토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서포터즈, 행정기관인턴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행정기관 취업연수를 적극 확대토록 유도하고 실업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알선 지원 및 지자체별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별 여성 Part-time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 취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관리 강화

지역별·품목별(자치단체 관리 물가 61종/개인서비스 49, 공공요금 12) 물가관리 소관부서 지정 및 책임관리제 시행을 통한 지역단위 물가관리 추진체계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경찰·세무·위생 등 『물가합동지도·점검반』 편성·운영, 불공

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민간 참여비율을 확대(70%까지)하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의 캠페인 등 자발적인 시민운동 지원, 업주·사업자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유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대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통제기능을 활성화하겠다.

#### IV. 그밖의 지역경제 관련 추진시책

##### 1. 향토자원 국가DB 구축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의 부가가치 자산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사장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인 DB구축 및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향토자원에 대한 국가 DB를 구축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IAL Capital)화 해나갈 계획이다. 즉, DB화된 향토자원중 지역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고 지역내 산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그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05년 하반기 중 향토자원에 대한 기초자

료 조사 및 DB구축하여 향토자원의 코드화를 통한 유형별, 지역별, 상품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06년 1월부터 DB화한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 마케팅,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자체의 향토자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향토자원개발촉진법 제정 문제는 법제정의 실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2. 시·도 출연연구원법 개정

시도 출연연구원(현재 16개)은 연구비 부족 등으로 대학·민간연구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며 인문사회 분야 인력 편중, 연구원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미비로 전문인력 확보 및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외부인사를 포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연구기능 다양화 방안마련, 생활·경제권역별 및 인근·유사연구기관간 통폐합 유도, 연구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한 재계약 제도 도입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외부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출연연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기제출 해놓은 상태('04. 9.21)로서 '05년 상반기중에 동법 및 동시행령을 개정하고 외부평가제 추진지침 마련 등 기능강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 3. 지역경제시책 지원사업 사후관리

'01~'04년까지 지원된 특교세 사업중 이월 및 변경사업이 다수 있어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05년 상반기 중 추진사업에 대한 진도분석 등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한 대체사업 검토 등 대책을 강구하며 '05년부터 지역현안사업(집행잔액)의 일환으로 추진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사업('01~'04)
  - 380건 2,223억원(벤처빌딩, 기술혁신센터, 임대공장, 지역특화산업)
- 재래시장기반정비사업('01~'04)
  - 220건 1,221억원(화장실, 진입로, 하수도, 주차장, 차양막, 아케이드 등)
-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02~'04)
  - 65건 110억원(특허권, 상품권 등의 출원 지원 및 권리화된 향토지적재산의 시제품 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
-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02~'04)
  - 578건 640억원(3대문화관광권 지역의 진입도로, 주차장, 소공원조성, 관광안내시설, 화장실 정비, 휴게시설 등)

### IV. 맺는말

금년 한해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술한 지역경제활력화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금년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력화 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 기업의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살리기 노력”을 凡정부적으로 추진코자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월 중에 『지방공기업 CEO 경영혁신대회』와 『권역별 신활력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월 중에는 재경부, 예산처 등과 합동으로 『BTL사업 및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현재 IT분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